"3S로 퀀텀점프 원년으로"

〈SMART·SEARCH·SAFE〉

〉〉1면 '애경 홍대 신사옥'서 계속

과감한 R&D투자·M&A 추진
인재 등 통해 신성장동력 확보

애경그룹 채형석 총괄부회장. /애경그룹

◆3S 그룹 체질 개선

애경그룹은 2018년 경영방침을 3S로 요약하고 3S(SMART·SEARCH·SAFE) 실행을 통해 퀀텀 점프를 위한 그룹 전략방향을 공유했다.

SMART는 기존 업무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관행 및 경직된 조직문화를 과감히 버리고 개선하자는 것이다.

또 SEARCH는 R&D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함께 M&A 추진 및 인재확보 등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SAFE는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안전과 환경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법규 준수 및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으로 윤리경영을 정착시키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 애경그룹은 올해를 3S를 통해 애경그룹이 퀀텀 점프를 하는 원년으로 정했다. 전년대비 20%대의 영업이익 성장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4600억원대의 투자를 계획했다.

안재석 그룹지주회사 AK홀딩스 사장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국가적 관심에 발맞춰 애경그룹도 제주항공 등을 중심으로 올해 1300여명의 신규채용을 예정하고 있다"며 "2018년 애경그룹의 퀀텀 점프를 위해서는 그룹의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포스코대우 김영상 사장(오른쪽) 유정복 인천시장(가운데), 인천상공회의소 이강신 회장이 지난 12일 '인천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 MOU 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포스코대우

포스코대우-인천시-인천상의 中企 해외진출협력 MOU

기업회의·전시 등 마이스 사업 논의

포스코대우는 지난 12일 인천광역시,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지역 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14일 밝혔다.

MOU 체결식에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강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상 포스코대우 사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마이스(MICE) 사업 등 협력사업을 논의했다.

MICE란 'Meet, Incentive Travel, Convention, Exhibition'의 약자로 기업회의, 포상관광, 국제회의, 전시회 등을 총칭하는 산업이다.

협약에 따라 포스코대우는 중국 청두에 한국상품관 2호점을 열어 인천지역 중소기업 입점과 제품 홍보, 수출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지원하며, 인천상의는 입점 업체 모집·관리를 맡는다.

포스코대우는 작년 6월 인천시와 함께 세계 최대 소비재 도매시장인 중국 이우시에 있는 국제상무성 수입상품관에 한국상품관 1호점을 개장했다.

/양성운 기자 ysw@

상생협력 목마른 中企 56% "정책 기대 높아"

중기중앙회 대기업협력체 대상 설문
가장 효과적인 동반성장 정책으로
'中企 적합업종·상생 결제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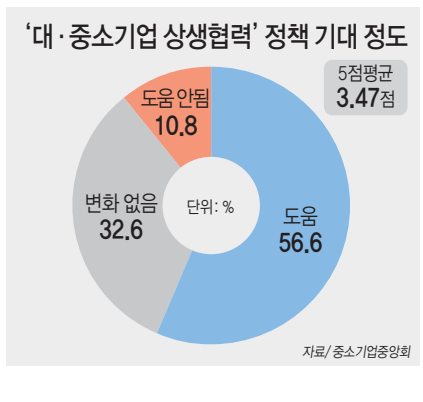
정부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기업의 기술탈취로 인한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과 '기술탈취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처벌'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력이익배분제 도입'과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가 중점적으로 추진돼야 할 정책으로 꼽혔다.

이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협력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정책수요'를 조사해 14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타났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정부의 정책으로는 응답기업의 47.4%(복수응답)가 신속한 피해구제를 꼽았다. 기술탈취 문제만큼은 원칙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35.4%로 높았다.

이와 함께 '기술탈취 사건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33.6%), '공정위·중기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체계 구축'(32.4%)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상생협력 정책 중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는 45%가 협력이익배분제를, 35.2%가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26.4%가 상생결제 등 상생협력 지원 확대 등을 각각 꼽았다.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대기업에 가장 바라는 점은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성과배분'(27.2%), '고질적인 갑을문화 및 거래관행 개선'(26%),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준수 등 공정거래 정착'(20.2%) 순으로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정책에 대해선 56.6%의 기업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변화가 없을 것'이란 답변도 43.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온 동반성장 기본계획에 대해선 응답자의 38.8%가 '상생협력 여건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악화됐다'는 의견은 9.2%에 불과했다.

또 정부가 추진해온 동반성장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정책으로는 44.4%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29.8%가 '상생 결제시스템'을 꼽았다.

그러나 '적합업종 등 민간 합의 중심 정책에 따른 실효성 부족'(36.4%) 등은 동반성장 정책추진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으로 지적됐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등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만큼은 조속히 실현돼야 하며, 대기업의 기술탈취 역시 중기부·공정위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중기부, 중소벤처무역協 설립 인가

160여개 회원사 보유, 3월 창립총회
中企 해외 교역 도우미로 본격 활동

수출을 위해 뭉친 한국중소벤처무역협회(KOSTA)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승인을 받았다.

14일 중소벤처무역협회에 따르면 이번 설립 인가는 중기부 출범 이후 경제단체 성격으로는 처음이다. 현재 160여 개 업체가 회원사로 등록을 한 중소벤처무역협회는 3월 창립총회를 거쳐 앞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 교역을 돕기 위한 활동을 본격 펼칠 계획이다.

초대 회장은 남전사 정난권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송재희 전 상근부회장이 공동으로 맡아 협회의 초기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수·출입을 하고 있거나 예정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 또는 수출입 관련 전문가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협회는 우수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마케팅 지원을 위한 시장개척단 파견, 공동브랜드 개발 및 인증, 무역 박람회 개최, 해외무역장벽 해소와 해외시장개척법제화 추진, 해외 바이어 발굴 및 해외시장 수요조사 연구 등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각종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송재희 공동회장은 "협회는 수출입 중소벤처기업간 상호정보교류 네트워크 구축,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과 함께 통관, 인증, 규제 등 각종 수출입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창립하게 됐다"면서 "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컨트롤타워와 허브기관 역할을 하는 동시에 이를 위해 기존의 해외진출기관 및 협회 등과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4일 서울 하늘이 뿌옇다. /연합뉴스

서울시 "오늘 출퇴근 대중교통 무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15일 하루 동안 출퇴근 시간 서울지역 버스, 지하철이 무료로 운행된다.

서울시는 이틀 연속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치는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자정부터 오후 4시까지 50㎍/㎥를 넘어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나쁨' 수준으로 예상되는 경우 내려지는 것으로 '대중교통 무료' 정책이 포함돼 있다.

대중교통 요금 면제는 출근 시간인 첫차부터 오전 9시까지, 퇴근 시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적용된다.

/김민서 기자 min0812@

공정위

서울시 상수도 사업 입찰 '짬짜미'한 9곳 업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시 '상수도 지하 배관망 DB 정확도 개선사업(GIS사업)' 입찰시 '짬짜미'를 한 업체에 과징금 32억9200만원을 부과했고 법인과 임원은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시는 200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2개 지구(2012년부터는 3개 지구)별로 동시에 GIS사업 입찰을 실시했다.

이 입찰에서 9개 사업자들은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 입찰물량 확보를 위해 각 지구별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9개 사업자는 공간정보기술, 대원항업, 삼아항업, 새한항업, 범아엔지니어링, 신한항업, 한국에스지티, 중항항업,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박인웅 기자 parkiu7854@

중소·벤처 특허 수수료 부담 '확' 줄인다

특허청 '특허 키움 리워드' 실시

납입한 수수료의 10~15% 페이백

중소·벤처기업이 기술혁신으로 더 좋은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이들이 낸 특허 수수료 총액의 10~50%를 되돌려 주는 '특허 키움 리워드' 제도가 시행된다.

특허청은 지난해 수립한 '4차 산업혁명시대의 지식재산정책 방향'에 따라 특허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허 키움 리워드는 중소·벤처기업이 특허 창출 활동으로 특허청에 연간 납부하는 수수료 총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다른 수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 등에 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의 연차등록료 감면도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중소·벤처기업 등은 특허등록 이후 9년차까지만 연차등록료를 30% 감면받았지만, 앞으로는 특허등록 후 전 기간에 걸쳐 연차등록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특허 1건당 20년간 권리유지에 들어가는 등록료 총액이 종전 836만원에서 445만원 수준으로 줄고, 이에 따라 핵심 특허를 전략적으로 장기간 보유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15일부터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